

##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해양과학기술 현황 및 협력 방안

허 식<sup>1\*</sup>, 유 해 수<sup>2</sup>

<sup>1</sup>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실, sikhuh@kordi.re.kr

<sup>2</sup>한국해양연구원 해저환경연구사업단

최근 들어 북한 서해안 일대의 원유매장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국내외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북한의 서한만 분지는 일일 생산량 450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어 석유부존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인 발해만 유전지대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대규모 매장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선진 외국석유회사들과 합자하여 석유개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은 당연하다. 북한은 1998년 10월 석유개발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 동경에서 ‘조선유전개발 투자설명회’를 시작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석유탐사 및 투자 현황을 살펴 보면, 탐사가 진행중인 곳은 3개 지역으로 서한만 B&C 광구 (스웨덴 Taurus사), 북부 서한만 및 육상 안주분지 (캐나다 SOCO사), 동한만 광구 (호주 Beach Petroleum사) 등이다. 상기 이외의 해저에는 원유가 부존할 만한 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길주-명천 지구대 등 일부 육상 지역에서는 원유가 발견된 곳도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1997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사업의 일환으로 함경남도 금호지구 대외원전 1·2호기 해양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북한 해역을 직접 탐사한 이후로 꾸준히 대북한 해양과학기술 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4년 4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과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자원개발 활용전망”에 대한 국제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동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부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런 공동연구가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므로 향후 해양과학기술 전 연구분야로 공동연구를 점차 확대 발전시키고 이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하여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북한 및 중국 접경해역인 황해는 정확한 해양관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해양 환경 및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황해의 북한 해역(서한만)은 세계에서 해양오염이 가장 극심한 중국의 발해만과 접해 있어 그 영향의 파악과 오염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995년 5월에 중국 청도에 설립한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등을 매개체로 하여 북한과 공동연구를 추진·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투자를 요구하는 해양환경 분야를 고려하면 해양개발과 동시에 남북한 해역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할 시점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 단계적 국가간 기술협력체제 구축하여 북한이 우선 관심 있는 분야(예를 들어 해저광물자원, 수산자원 및 항만 등)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공동 연구를 통해 주변 연안국과의 해양환경조사 및 통합 광역 해양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해양과학 기술협력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공동학술연구를 통한 교류확대 및 신뢰회복 구축,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및 자원조사 협의회 구성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해양자원 개발 이외에 남북한의 향후 추진 사업은 (1) 북한의 해양 및 하상 골재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골재가 부족한 남한에 수출하는 방안, (2) 서해안에 분포하는 한반도 최대 갯벌의 특성을 조사하여 해안습지 보전 노력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하는 방안, (3) 황해도 백사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매우 광활한 백사장을 친환경적 관광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4) 신의주 개발 등에 따라 오염이 예상되는 압록강 하구에서는 환경특성 및 자연환경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개발에 대비한 환경보전 구축 방안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 해양관할권 확대가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해양개발의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실리주의적 세계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남북한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협력교류의 활성화와 새로운 첨단 해양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등 남북 상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양에서 남북한 각기 독자적인 해양관리 및 해양산업의 전개보다는 양국 공동협력에 의해 주변국의 한민족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